

‘채상병 특검법’ 민주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야 단독 처리... 국힘 표결 불참

윤재옥 “재의요구권 건의” 예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 가결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 통과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이 안전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전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규탄 집회를 주도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른 사기 범죄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시

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게 골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핵심 쟁점인 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

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28조)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을 양보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만큼 민주당이 특조위 주도권을 쥔 전망이다.

활동 기간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민생물가 태스크포스’ 가동

반도체 등 전략산업 TF도

대통령실은 2일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TF 모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괄 지휘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TF는 가격변동폭이 크거나, 국민체감률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개별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구조 및 해외요인의 파급경로 등 구조적 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오는 24일까지 시군서 접수 최대 5억원 시설·장비 지원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생산·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은 일반 농산물과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수성을 반영, 생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친환경농산물 전

용 시설 현대화를 통해 선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10ha 이상(벼 이외 품목은 2ha 이상)을 생산·가공·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5억 원 한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는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생산자단체의 시장 경쟁력 제고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해서 펼쳐 ‘대한민국 유기농 1번지 전남’의 위상을 더욱 높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맞춤형 지원을 펼쳐 올해까지 43개소에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으로 약 225억원을 지원했다.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군 친환경농업 부서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광지혜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양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